

한국사회 저출산 원인의 깊은 구조(deep structure) 분석을 위한 시론 : 국가의 성격 및 젠더 관계를 중심으로

최 은 영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한국 사회는 2004년 1.16이라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을 기록하였다. 출생아수 역시 합계출산율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4년에는 1960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만 명의 신생아가 탄생하였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관심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고령화의 속도와 그 경제적 파급효과에 맞추어져 있다. 최근 저출산율에 기초한 정부의 인구추계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총인구는 2020년에 49.9백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7%(고령화 사회)에서 14%(고령사회)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8년, 14%에서 20%(초고령 사회)는 불과 8년에 지나지 않아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에 도달한 것은 1983년이 었다. 2003년부터 한국사회가 저출산에 대한 정책대응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때 정확히 20년이 지난 후이다. 그렇다면, 한국정부의 정책대응은 왜 늦었으며, 1.16이라는 극저출산율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1960년대 당시 베이비붐 현상으로 인한 폭발적인 인구증가는 극히 미약한 경제성장 마저 잠식하여 '빈곤의 악순환'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따라서 1961년 당시 정부가 최초의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높은 인구성장을 규제하는 정책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경제개발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채택한 가족계획 위주의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한국 인구정책의 효시였다. 출산율은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아울러 영양상태 개선, 보건의료 발달 등으로 인하여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반세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인구학적으로 다산다사의 전기 균형상태에서 소산소사의 후기 균형상태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한국사회는 합계출산율이 1.7 수준에서 유지되던 1980년대 중엽 이후에도 출산율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출산억제정책을 오히려 강화하였고, 인구자질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1996년에 이르러서였다.

본고는 이러한 지연된 정책대응(delayed policy response)을 한국의 개발국가

(developmental state) 성격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시론이다. 전 세계적인 인구전환의 역사를 볼 때, 경제개발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고출산을 억제하는 것은 전형적인 개발국가의 과제였다. 이러한 개발국가가 가부장적인 전통적 이데올로기를 고수하고 남성소득자모형(male breadwinner model)을 전형으로 하는 사회·경제정책을 추진할 때, 즉, 개발국가의 성격과 전통적 젠더구조가 결합되어 고착될 때, 출산이나 양육은 사적영역으로 치부되고 당연히 정치적 담론과 정책의 관심사로부터 멀어질 수 밖에 없다. 보편적 사회서비스 발전이 늦어지는 복지국가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가 미발달되어 있다면 출산이나 양육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개발국가의 전통적 유산이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있고, 민주국가와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실질적인 민주화(=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과제를 중첩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나서도 20년 동안 정책 대응이 지연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더구나, 노동시장 경력중심의 사회보험이나 사회부조방식의 프로그램은 외연적인 틀을 잡아가고 있으나, 사회서비스가 극히 미발달하고 여전히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의 복지특성을 감안할 때 출산율의 저하는 당연한 귀결로 볼 수 있다.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출산율은 미혼율과 유배우 출산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은 주로 결혼을 통해 가족이 형성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구성, 유지, 변동 등이 출산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점에서 출산율에 대한 논의는 결혼과 가족의 형성 및 출산을 둘러싼 인구학적 요인 및 사회경제적 여건과 연관시켜 생각해야 한다. 저출산의 문제가 그 동안 사회복지 학자들에게 별반 관심의 영역이 아닌 채 남아 있는 동안, 인구학자를 중심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주요원인으로 빈번히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가치관의 변화는 예전에 비해 기대자녀수가 감소하는 일반적인 경향은 설명할 수 있지만 '왜 기대자녀수만큼 실제로 자녀를 낳지 못 하는가'를 모두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본고는 최근의 전국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결과를 토대로,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원인을 살펴본다. 따라서 유배우 출산력, 미혼율, 초혼 및 초산연령의 변화 등을 분석하며,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이 불가능한 현실, 남성과 공유되지 않는 돌봄 노동(care work), 기업의 가족 친화적이지 못한 관행(장시간 근로, 술자리 문화, 기혼여성근로자 차별 등), 청년층의 실업 증가, 고용시장의 불안, 교육비를 포함한 자녀양육의 과중한 부담 등을 검토한다. 나아가, 서비스 미발달형의 사회복지, 사회적 제도와 가족 제도의 변화간의 지체 현상, 양성평등 의식과 기존의 가족규범 사이에 격차,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조응하지 못하는 사회정책 체계, 가족 내 성평등의 부재 등을 분석에 포괄한다. 흔히 거론되는 피상적인 원인이 아닌 저출산 원인의 깊은 구조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은 매우 미흡하여 개별 가족,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여성에게 돌봄 노동의 대부분을 맡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선진국의 경우도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러한 제도가 미발달된 곳에서는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가족의 전통적 기능만을 강조하고 과거의 성별 노동분업 체계를 고수하는 사회일수록 경제성장과 노동생산성 일변의 정책기조를 가진 사회일수록, 일상생활에서 여성과 부모가 노동시장 근로와 자녀양육을 수행하면서 겪는 괴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저출산의 원인도 그 해결책도 시장-가족-국가의 역할분담 구조와 여성-남성의 역할분담 구조에서 찾아져야 한다.

그 동안 방치되어 왔던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구조에 대한 대응의 미비가 이제는 복지욕구의 다각화에 대응하면서 복지국가의 내실화를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사회에 가장 커다란 정책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족임금(family wage)에 기초한 남성-생계부양자(male breadwinner) vs. 여성-피부양자(female dependant)의 2분법에 기초한 비버리지식 복지국가의 침식과 재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요즘, 젠더관계와 공-사 영역 2분법 및, 유급노동-무급노동의 강고한 틀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새로운 위험과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은, 국가-가족의 영역 간 이분법을 허물고, 젠더구조의 평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정책의 틀을 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출산 정책은 여기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것은 제도와 프로그램의 확충 및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넘어, 복지국가의 진정한 내실화를 기하는 기회구조로도 작용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조혜정(1986) “가부장제의 변형과 극복: 한국가족의 경우“, 한국여성학, 제2집. pp.136-201.
- 최은영 외 (2005) 한국의 저출산관련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책여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은영 “보살핌 노동과 젠더: 복지국가 재편의 또 다른 차원” 다께가와 · 이해경 편저 (2006) 복지레짐의 한일비교: 복지국가, 젠더, 노동시장. 동경대학교 출판부(in Japanese)
- 통계청(2005.1.) 인구구조특별추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노동연구원(2005) Low Fertility in Korea: Analysis on Socio-economic Factors.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Crompton, Rosemary(ed.) (1999) Restructuring Gender Relations and Employment. Oxford Univ. Press.
- Esping-Andersen, Gosta (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Univ. Press.
- Fraser, Nancy (2000), "After the Family Wage: a Postindustrial Thought Experiment", Barbara Hobson(ed.) Gender and Citizenship in Transition. Routledge.
- McDonald, Peter (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pp. 427-439.
- Pascall, Gillian and Jane Lewis (2004) "Emerging Gender Regimes and Policies for Gender Equality in a Wider Europe", International Social Policy, Vol. 33, No. 3, pp.373-394.